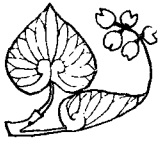


# 環境對策과 經濟成長



具 然 昌

〈本協會編輯委員〉

〈경희대 法科大學長〉

각국의 環境對策에 있어서의 目標은 經濟成長의 목표와의 關係에서 결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보다 환경보전을 우위에 두는 환경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1人當 평균 국민소득이 2000 불이 못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전우선주의의 환경대책의 수립·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행된지 6년이나 된 環境保全法의 실효성이 지금까지 지극히 낮았던 것도 여기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의 적극적인 대책을 결코 미루어 두어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도 회복하기 힘든 또는 결정적인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이미 현저하게 파괴된 환경을 집중적으로 회복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염의 전국적인 규모의 기초조사가 철저히 실시되어야 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대책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추진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특히 1988년의 서울올림픽과 관련하여 서울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집중적인 환경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전세계에 한국을 소개하는 유일한 기회에 자칫하면 지나치게 오염된 한국을 널리 알려주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 환경대책은 하루 아침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8올림픽에 대비하는 뜻에서도 보다 집중적이고도 적극적인 환경대책이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하수도의 정비, 하수처리장의 확대를 비롯하여 배출부과금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가 특히 요구된다.